

야·청 '평양선언 비준' 갈등 격화

한국당 '위헌' 공세에 조명균 통일장관 해임 카드까지 꺼내 靑 "법리는쟁 안돼" ... 與 "한국당은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

문재인 대통령의 평양공동선언·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을 둘러싼 야·청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특히,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25일 국회 동의 절차를 거치지 않은 '위헌적 행위'라고 공세 수위를 높이며 탈북민 기자 취재제한 등을 고리로 조명균 통일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 카드까지 꺼내놓고 나섰다. 이에 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한국당을 '무조건 반대만 하는 청개구리'라며 냉전수구 세력으로 몰아세웠다. 청와대도 "법리는쟁으로 70년간 생체기반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 없다"며 선을 그어 나갔다.

이처럼 정국이 급랭하며 다음 달 열리기로 한 여야정 상설협의체와 내년도 예산·세법개정안 심의에 빨간불이 켜졌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헌법에서는 남북관계를 국가 대국가의 관계로 보지 않는다. 반면 국제법 차원에서는 북한을 국가로 인정하고 있다"며 "24일 (북한이 국가가 아니라) 말한 것은 평양선언 비준이 위헌이라고 주장하니 헌법 측면에서 판단하지는 않겠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법리 논쟁으로 지난 70여년의 뒤를 그리고 생체기반 역사, 남북관계가 재단될 수는 없다는 점"이라며 "남북관계가 평화·번영의 길로 나아가도록 국회에서 생산적인 논의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여당도 지원사격에 나섰다. 홍영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야당은 정부가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를 요청할 때는 무조건 반대하더니 이번에는 국회 동의를 받

지 않아 위헌이라고 한다.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에 대해서는 무조건 반대하는 청개구리 심보"라고 비판했다.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평양공동선언과 남북군사합의서 비준은 판문점선언의 국회 비준 동의를 전제조건으로 하지 않는다"며 "한국당은 국론을 분열시키는 백해무익한 정쟁을 멈추고 판문점선언 비준동의를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경의선 철길 걷는 국토위 위원들

한국당은 이날도 정부·여당의 입장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비판하며 소관 상임위원 외교통일위·국토교통위 합동대책회의까지 열어 대대적 공세를 벌였다. 김성태 원내대표는 이 회의에서 "국가안보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대통령이 독단적으로 결정하면서 위헌적 행위를 했다"고 말했다. 또 "헌법 정신은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된 문제는 국민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고, 국민 동의는 곧 국회 비준을 의미한다"며 "정부의 비준은 국민을 무시한 처사"라고 비판했다.

한국당은 문 대통령의 비준에 항의하는 차원에서 이날도 예정된 국토교통위의 경의선 도라산역 현장 시찰을 보이콧한데 이어 조명균 통일부 장관에 대한 해임건의안을 추진하기로 하는 등 전선을 확대했다.

이런 가운데 제3당인 바른미래당도 비판적 입장을 보이고 있다. 손학규 대표는 전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순서가 잘못됐다. 이렇게 원칙 없는 정부가 있느냐는 한심한 생각"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여야 4당 사법농단 특별재판부 도입 합의

한국당 제외 원내대표 기자회견... 내달 정기국회 내 법안 처리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25일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사법농단 의혹을 규명하기 위한 특별재판부 설치를 추진하기로 했다. 사법농단 의혹의 핵심 당사자 다수가 현재 서울중앙지법 형사재판부 재판장을 맡고 있는 만큼 별도의 재판부를 꾸려 재판거래 혐의 등에 대한 공정한 심리를 진행하도록 하자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 바른미래당 김관영, 민주평화당 장병완, 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정론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1월 정기국회 회기 내 특별재판

부 설치를 위한 법안 처리를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들은 이날 회견문에서 "일반 형사 사건의 압수수색 영장 발부율이 90%에 달하지만, 이 사건 영장은 단 한 건도 온전히 발부된 적이 없다"며 "현행 재판부에 의한 재판으로는 공정한 재판을 기대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조유 의 사법농단 사태를 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서 특별한 절차를 통해 재판 사무분담을 진행해야 한다"며 "한국당도 동참하길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와 관련해서 민주당 박주민 의원이 지

난 8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 재임 기간 중의 사법농단 의혹 사건 재판'을 위한 특별형사절차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이 법안은 대한변호사협회 등이 간접 참여하는 특별재판부 후보 추천위원회를 두고 여기서 추천하는 현직 판사 3명을 각각 서울중앙지법과 서울고법에 배치해 사법농단 사건을 심리하도록 규정했다.

아울러 특별재판부의 판결문에는 합의에 관여한 모든 판사의 의견을 적시하도록 하고, 1심에 한해서 일반 시민의 평의 내용을 재판부 판결에 반영하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도록 했다. 다만, 여야 4당은

특별재판부 설치와 관련한 구체적 내용에 대해서는 추가 협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이른바 '박주민 법안'에 대해 여야 4당이 입장을 달리하고 있기 때문이다.

여야 4당이 하나의 안을 도출하더라도 원내 2당인 한국당을 설득해야 하는 난제가 남는다. 여야 4당이 특별재판부 설치를 위한 공조를 이어갈 경우 국회법상 법안 통과를 위한 의결정족수 충족에는 문제가 없지만, 법안 심사를 담당할 법제사법위원회 위원장(여당인 의원)을 한국당이 맡은 만큼 한국당의 협조가 필요한 상황이다.

법안 처리가 지나치게 늦어지면 입법 취지가 무색해질 수도 있다. 사법농단 의혹 사건 관련자에 대한 검찰 기소가 11~12월 이뤄질 경우 특별재판부 설치 전 재판 배당이 끝날 수 있기 때문이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국감 인물 지방 재정난 가중·문화전당 조직 비효율 지적

바른미래당 주승용 의원



공무원 및 관련 종사자, 그리고 호남민들까지 불만을 겪고 있다"며 세종역 신설을 주장했다. 현재 KTX호남선은 오송역 우회 노선이어서

국회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바른미래당 주승용(여수·4선) 의원이 이번 국감에서 중진의 관록을 유감없이 발휘하고 있다. 국회부의장을 맡고 있으면서도 국정감사에 그 누구보다 열정적으로 참여, 호평을 받고 있다.

주 의원은 우선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복지사업 확대 등으로 향후 5년 동안 최소 19조원 이상의 지방 예산이 추가 소요, 지방 재정난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현재 8대 2 비율인 국세 대 지방세 조정 등 지방재정에 대한 새로운 지원체계 정립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주 의원은 또 세종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세종시 내에 KTX 정차역이 없어

이용객들이 시간적, 금전적 손실을 보고 있다는 것이다. 이에 충북지역 정치권이 반발하면서 세종역 신설 문제는 정치권의 '뜨거운 감자'로 부상하고 있다. 주 의원은 25일 이뤄진 광주시에 대한 국감에서도 광주형 일자리, 도시철도 2호선 공론화 등 광주 현안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는 한편, 국립아시아문화전당 공사기간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 문제, 조직 이원화의 비효율성 등을 따듯하게 지적했다. 【임동욱 기자 tuim@

농어촌공 혈세 낭비·농가 지원책 전방위 파져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



있는 생활관 건물이 없어 연간 6000여명 교육생의 불편이 예상된다며 관련 시설의 조속한 건립을 촉구했다. 또 이날 지난 10년간 2000억원

"오랜 만에 농어민을 위해 전력을 다하는 국회의원이 나온 느낌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 맹활약을 펼치고 있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서삼석 의원(영암·무안·신안)에 대한 정치권 관계자들의 애기다.

서 의원은 여당 의원이면서도 농어업 정책의 난맥상을 짚어내며 정부 부처 관계자를 강하게 질타하는 과정에서 농어민에 대한 한없는 관심과 애정을 보였다는 평을 받았다.

구체적으로 서 의원은 25일 한국해양수산연수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목포에 건립 중인 서남해권 종합비상훈련장에 식당과 숙박시설 등의 편의를 제공할 수

이 넘는 혈세가 투입된 바다숲 사후관리가 허술한 점을 들춰냈다. 또 지난 22일 국감에서 서 의원은 산지가격지정정책 사실상 포기, 수매물량 판매 통한 수익 창출에만 급급하고 농가 지원 시책에는 인색한 농수산유통공사를 강하게 몰아붙였다. 같은날 농어촌공사에 대한 국감에서는 같은 설계 변경으로 3500억원 혈세를 낭비한 사실을 꼬집었다.

【박지경 기자 jkpark@kwangju.co.kr

문대통령 "여성 상대 범죄 끝까지 심판"

경찰의 날 축사... "검·경 서로 견제·협력해야 인권 보호"

문재인 대통령은 25일 "여성의 삶과 인격을 파괴하는 범죄들을 철저히 예방하고, 발생한 범죄는 끝까지 추적해 반드시 법의 심판대에 세워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백범기념관에서 열린 제73주년 경찰의날 기념식에 참석, 축사를 통해 "사회적 약자의 고통과 목소리에 더욱 귀를 기울여 주기 바란다"며 이같이 밝혔다.

문 대통령은 이어 "지난 6월 정부가 발표한 검경수사권 조정안은 경찰에 대한 국민 신뢰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검찰과 경찰이 긴밀히 협력하면서 한편으로 서로를 견제하면 국민 인권·권익은 더욱 두텁게 보호될 것"이라며 "그러기 위해 경찰은 수사의 공정성·전문성을 획기적으로 높여야 하며 엄정하고 책임 있는 수사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2019학년도 광신대학교 학부/대학원 신입생 모집

사랑과 감사의 64년
1954~2018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로 오십시오!!



학부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모집인원은 변동될 수 있음.

계열	모집단위	수시	정시
인문	신학과	30	16
	한국어교육학과	3	1
사범	유아교육과	8	2
	복지상담융합학부 (사회복지학 전공 / 교정행위교육상담학 전공)	31	3
예능	음악학부 (음악학 전공 / 실용음악학 전공)	23	7

* 신학과는 군중사관후보생(군중장교) 선발시험에 응시 가능.
(합격시 학부 4년, 신학대학원 3년 입학금 및 등록금 전액 면제, 기숙사비 면제)
* 한국어교육과는 한국어 교원자격증(2급)을 취득할 수 있음.
* 복지상담융합학부는 사회복지사, 보육교사, 건강가정사, 평생교육사, 상담심리지도사, 청소년상담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 유아교육과는 유치원 정교사(2급), 보육교사 자격 취득할 수 있음.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수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9. 10(월) ~ 14(금) • 전형일 : 2018. 9. 28(금)

정시모집 : 원서접수 : 2018. 12. 29(토) ~ 2019. 1. 3(목) • 전형일 : 2019. 1. 10(목)

대학원

▶모집학과 및 모집인원

대학원	과정	모집학과	모집인원	
신학대학원	석사	신학과(M.Div.)	65	
		신학과(Ph.D.)	6	
일반대학원	박사	목회학과(D.Min.)	2	
		유아교육학과(D.Ed.)	5	
		사회복지학과(D.S.W.)	5	
		상담심리치료학과(D.C.S.)	5	
		코칭심리학과(D.Psy.)	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5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석사통합	통합예술통리학과(D.C.S.)	10
		석사	신학과(Th.M.)	25
			유아교육학과(M.Ed.)	8
상담치료대학원	석사	상담심리치료학과(M.A.)	15	
		청소년상담지도학과(M.A.)	10	
사회복지대학원	석사	사회복지학과(M.S.W.)	20	
		평생교육학과(M.Ed.)	10	
국제대학원	석사	한국어교육학과(M.Ed.)	20	
		음악학과(M.A.)	6	
음악대학원	석사	실용음악학과(M.A.)	6	

▶원서접수 및 전형일정

• 추후 공지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백지사로 36

입학문의 ▶ 학부 062) 605-1114 / 대학원 062) 605-1115